

2022
12.12

KRIHS POLICY BRIEF
No. 895

발행처 국토연구원
발행인 강현수
www.krihs.re.kr



국토정책 Brief

KRIHS POLICY BRIEF

보편적 가치를 원칙으로 평화와 공동번영을 선도하는 ‘한반도 그린공동체’



주요 내용

- ① 기존의 기능주의에 입각한 남북협력은 정치적·군사적 갈등으로 지속가능성에 한계가 있었으므로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추진
- ② 한반도 그린공동체는 보편적 가치인 ‘환경’을 중심으로 국제협력, 인도적 지원 및 개발협력을 통합해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환경협력 체계를 의미
- ③ 정부의 ‘담대한 구상’은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전향적인 태도변화가 필요하므로 비핵화를 향한 신뢰와 협력을 축적할 수 있는 ‘한반도 그린공동체’와 통합 추진
- ④ 한반도 그린공동체는 ① 자유주의적 환경공동체, ② 국제·국가·지역의 환경의제 연계, ③ 국토·환경계획 연계, ④ 지속가능한 사회발전, ⑤ 과학적·제도적 기반으로 구성

정책제안

- ① (담대한 구상을 더욱 담대하게)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따른 지원뿐만 아니라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비핵화를 향한 신뢰와 협력을 축적할 수 있는 한반도 그린공동체 추진
- ② (한반도 그린공동체 구축) 국제사회, 우리나라와 북한이 참여하는 ‘한반도 그린공동체 국제환경협력 위원회(가칭)’를 구성하고 지역주도의 환경 이니셔티브로 추진
- ③ (인도적 개발협력 추진) 사회발전 전략으로써 대북제재를 고려한 환경협력이 연계된 지속가능발전과 주민의 회복력을 강화할 수 있는 ‘인도적 개발협력’ 추진
- ④ (모니터링 기반의 과학적 접근) 코로나19 및 북한의 폐쇄성에 대응하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국제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위성영상 기반의 모니터링 및 평가체계 개발
- ⑤ (국제법·제도 기반의 제도 마련) 환경협력 추진 시 공정성 확보가 가능하고 지식·기술·재원 등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국제법 기반의 (가칭) 한반도 환경법 제정

임용호 부연구위원



1

보편적 가치 중심의 지속가능한 환경협력을 추구하는 ‘한반도 그린공동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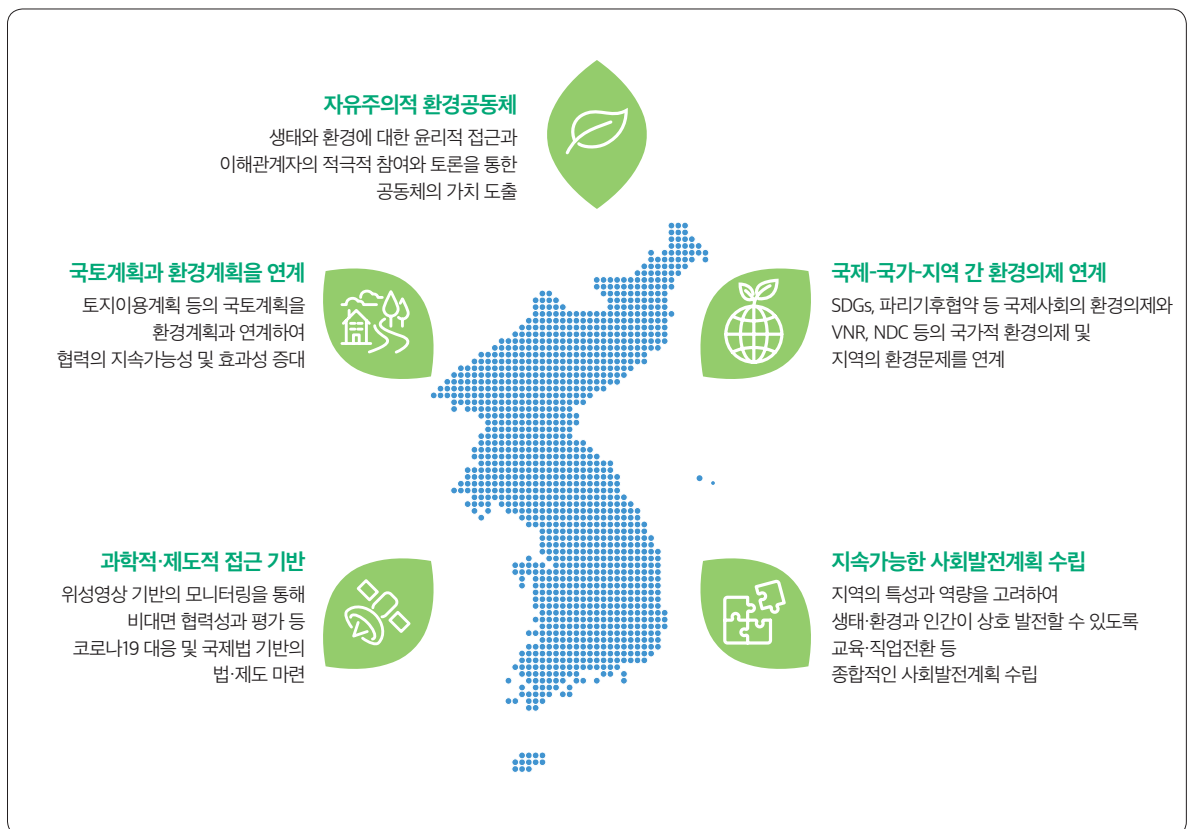
한반도 그린공동체란 국제·국가·지역의 환경의제를 연계하고 과학적 접근을 기반으로 국토계획과 환경계획 연계 및 종합적 사회발전을 통하여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

- 한반도 그린공동체는 환경 거버넌스보다 강화된 공동체로서의 책임을 전제로 생태공동체주의와 같이 생태와 인간의 상호 호혜적인 성장을 추구하나 대안적 지역발전으로 확대·발전시킬 수 있음
- 한반도 그린공동체는 보편적 가치인 환경에 대한 국제적·지역적 환경연대를 기반으로 이데올로기적 갈등을 배제하고 다자협력을 통해 환경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하는 새로운 한반도 환경협력체계임

한반도 그린공동체는 ① 자유주의적 환경공동체, ② 국제·국가·지역 간 환경의제 연계, ③ 국토·환경계획 연계, ④ 지속가능한 사회발전계획 수립 및 추진, ⑤ 과학적·제도적 접근기반으로 구성

- 자유주의적 환경공동체는 구성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국제사회의 환경의제와 지역 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세방화(glocalization)함으로써 효과적인 환경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필수 요소임
- 국제·국가·지역 간 환경의제 연계는 환경협력을 위한 목표를 일치시킴으로써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지식·기술·제도의 이전 및 공동활용과 자원 확보 등을 용이하게 할 수 있음
- 환경협력을 통해 자연환경을 복원하더라도 식량부족·개발압력 등으로 환경이 다시 훼손될 수 있으므로 개발제한구역 지정 등의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의 제도적 연계를 통해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함
- 환경복원으로 인해 의도치 않은 지역문제(식량부족 등)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인도적 지원과 함께 일자리 전환 및 지역산업 육성을 병행함으로써 북한 주민의 생활여건 향상을 꾀하는 사회발전을 추구함
- 환경협력은 주로 실외에서 수행하므로 위성영상 기반의 모니터링을 활용함으로써 데이터 기반의 투명한 협력이 가능하고 코로나19와 북한의 폐쇄성으로 인한 대면협력의 대안으로 활용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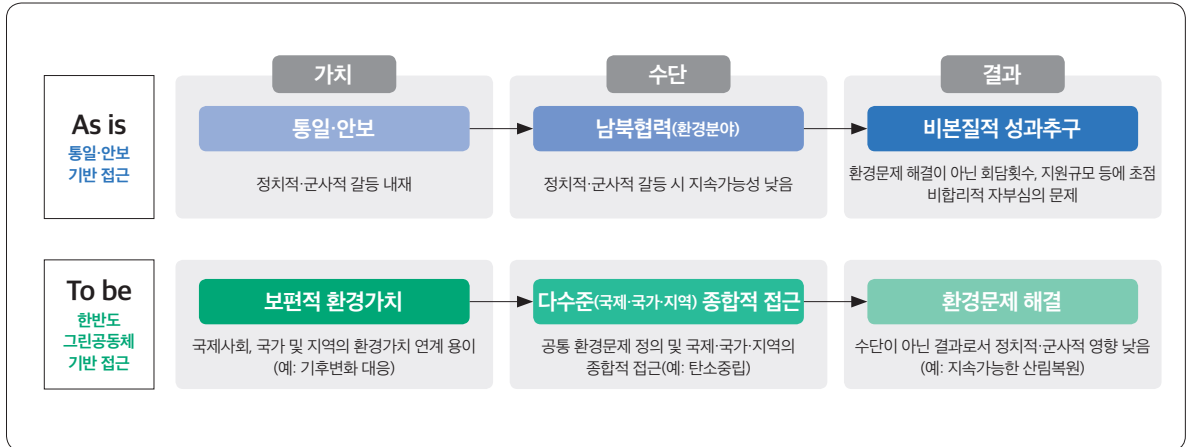
그림 1 한반도 그린공동체 개념



2 한반도 그린공동체의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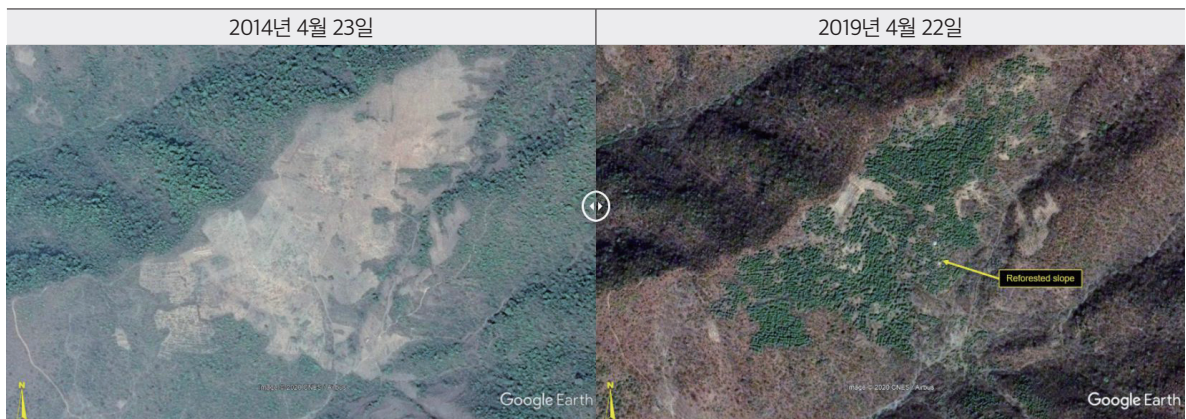
환경문제와 같은 월경성 문제의 유일한 해법은 '협력'뿐이므로 국제사회, 우리나라와 북한이 환경문제 해결이라는 공동 목표(가치)하에 지속가능하고 효과적인 협력이 가능한 한반도 그린공동체 추진이 필요

그림 2 환경문제 해결에 대한 통일·안보와 한반도 그린공동체 기반 접근의 차이점



- (지속가능성 강화) 한반도 그린공동체는 기존의 통일과 안보를 위한 수단으로서의 환경협력이 아닌 보편적 가치로서 한반도의 환경문제를 해결함으로써 협력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음
- (기대효과 확대) 글로벌 환경의제와 지역의 환경문제 해결전략을 연계하면 더 효과적이고 강화된 복원력과 적응능력으로 취약성을 감소시켜(Angie D. et al. 2019, 2) 협력의 효과를 높일 수 있음
- (협력의 유연성 증대) 한반도 그린공동체는 국내외 정세변화에 따라 국제사회의 공정하고 투명한 조정과 중재가 가능하며 직·간접 협력, 옵서버 등 다양한 형태의 유연한 참여로 협력의 지속가능성을 높임
- (안정적 재정조달) 북한의 산림복원 비용만도 20년간 약 14조 원 이상이 소요(임철희 2020, 53)될 것으로 예상되어 안정적인 재정 확보가 중요하므로 국제협력을 통해 재정의 불안정성을 보완할 수 있음
- (코로나19 대응) 코로나19는 대면협력뿐만 아니라 협력성과 데이터 수집 및 평가를 어렵게 할 수 있으나 환경협력이 야외에서 수행되는 특성과 위성영상 분석 등의 과학기술을 접목함으로써 극복할 수 있음
- (인도적 위기 극복) 북한의 계속된 무력도발과 코로나19로 국제적 고립이 장기화하면서 인도적 위기가 고조되고 있어 환경협력과 연계한 북한 주민의 회복탄력성을 높일 수 있는 인도적 개발협력 추진이 필요

그림 3 모니터링 기반의 한반도 그린공동체 성과분석 예시(평양시 순창리 일대)



자료: Bruce S. C. 2020.

한반도의 비핵화를 향한 신뢰와 협력을 축적하는 '한반도 그린공동체'

'담대한 구상'은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조치를 전제로 하나 북한이 이를 거부하거나, 협상에 임한다 할지라도 결과를 담보하기 어려우므로 북한 주민의 인도적 위기 해소 분야를 강화할 필요

- 윤석열 정부의 '담대한 구상'은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조치에 상응하여 초기 협상과정에서부터 경제지원을 제공하는 등 경제·정치·군사적 조치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구상임
- 북한을 비핵화 협상으로 유도하기 위해 대규모 인프라 개발협력을 강조하고 있으나 정부의 확고한 협력의지를 피력하기 위함임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현재와 같은 대북제재하에서는 추진이 어려움
- 북한이 전향적으로 비핵화 협상에 임해도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대북제재 해제가 어려우며 개발협력을 추진해도 최종협상이 결렬될 경우 투자실패에 대한 비판을 받을 수 있음
-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협력사업이 인도적 지원으로부터 개발협력까지 적용이 가능도록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실효적인 협력성과를 위해 연계분야까지 고려한 종합적인 접근법이 필요함

'한반도 그린공동체'는 보편적 가치인 환경협력과 이와 연계한 북한 주민의 인도적 위기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분야의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담대한 구상'을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제시

- 한반도 그린공동체는 대북협력의 불안정성과 대북제재를 고려하여 북한의 비핵화 이전에는 북한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인도적 개발협력과 이를 위해 필요한 인도적 지원을 병행할 수 있는 방안 제시
- 인도적 지원은 원조 의존성 심화 등의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중장기적으로는 개발협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으며 북한도 인도적 지원보다 개발협력을 선호하나(Reliefweb 2005) 대북제재로 한계가 있음
- 대북제재로 인해 2018년에만 4천 명의 사망에 영향을 미치는(Park et al. 2019) 등 국제사회는 대북제재에 의해 의도하지 않게 북한 주민의 인도적 위기가 고조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음(UNSC 2019)
- 즉, 비핵화 이전에는 북한의 인도적 위기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완화하고 북한의 개발협력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UN 전략계획을 기반으로 한 인도적 개발협력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필요가 있음
- 한반도 그린공동체는 비핵화 협상 진전에 따라 사업을 유연적으로 확대 또는 축소할 수 있도록 인도적 개발협력과 연계가 가능한 연속성 있는 인도적 지원 사업과 개발협력 안배하여 제시
- 인도적 개발협력이라고 하더라도 북한 주민의 인도적 위기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은 북한 정부에 있으며 과도한 지원은 북한 정부의 책임회피를 돕는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으므로 국제사회와 긴밀한 협력하에 추진

그림 4 '담대한 구상'과 '한반도 그린공동체' 비교

	인도적 지원 (Humanitarian Assistance)	인도적 개발협력 (Humanitarian Development Cooperation)	(국제)개발협력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정의	비상사태에 대응하여 인도적인 목적으로 수행하는 물질적 또는 물류적인 지원	인도적 위기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국가개발역량을 강화하는 협력	빈곤퇴치와 경제·사회 개발을 위하여 수원국의 개발전략에 따라 지원하는 협력
특징	단기적 지원 식량·식수·위생·보건·구조 분야 중심	중·장기적 지원 인도적 지원 분야 및 주민 복원력 제고 분야	중·장기적 지원 사회·경제·산업 인프라 및 서비스 등
現 대북제재하 추진 가능성	'가능'	국제사회의 동의와 협력을 기반으로 '가능'	'불가'
담대한 구상	한반도 자원·식량 교환 프로그램	북한 민생개선 시범사업 농업 생산성 제고를 위한 기술 지원 프로그램 병원·의료 인프라 현대화 지원	발전·송배전 인프라 지원 항만·공항 현대화 프로젝트 국제투자 및 금융 지원 프로그램
한반도 그린공동체	환경협력 관련 물자지원 식량지원 에너지(태양) 지원	양묘장·오폐수처리장 등 환경 인프라 협력 내수배제시설 등 재난재해 인프라 협력 환경정보 수집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	일자리 전환 및 지역산업 육성 (1차 산업→2차 산업 이상)

‘남북 그린데탕트’와 ‘한반도 그린공동체’ 비교

남북 그린데탕트는 접경지역 간 환경교류·협력을 발전시켜 통일을 목표로 하는 통일·안보정책으로 기능주의적 접근의 한계와 국내외 여건변화로 보편적 가치를 중심으로 한 접근이 필요

- ‘데탕트’라는 단어에서 알 수 있듯 ‘긴장완화’를 통한 통일·안보를 목표로 하나 남북한의 정치·군사적 이유로 추진이 어려우며, 특히 경제적 이익 중심의 접근은 비합리적 자부심 등으로 지속가능성에 한계를 나타냄
- 2017년 북한의 ‘핵무력 완성’ 선언으로 남북한 중심에서 국제·외교를 중심으로 한 대북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국제협력의 내재화 및 보편적 가치 중심으로 한반도 협력을 구상할 필요가 있음

한반도 그린공동체는 환경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이며 이를 위해 포괄적 접근을 기반으로 북한 주민의 회복력을 강화함으로써 지속가능한 환경협력을 추구하는 것이 목적

- 환경문제는 사회·경제적 요인과 관계가 깊어 환경문제에 대한 해결만으로는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려우므로 포괄적인 클러스터 접근법¹⁾을 기반으로 지역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인도적 개발협력 추진
- 코로나19로 인한 대면협력의 한계에 대응하고 정보 접근성도 강화할 수 있는 위성영상 기반의 모니터링 및 검증체계 도입은 국제협력의 신뢰성을 높이고 원활한 자원조달에도 기여 가능

표 1 ‘남북 그린데탕트’와 ‘한반도 그린공동체’ 특징 비교

남북 그린데탕트	구분	한반도 그린공동체
통일·안보정책	분야	환경정책
환경협력을 기반으로 한 한반도 긴장 완화 ⇒ 안보확립 및 평화통일 추구	목적	환경에 대한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한 종합적 접근 ⇒ 환경문제 해결
남북한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 참여	협력 주체	국제사회(남북한 포함)
환경인프라, 국토환경복원, 녹색경제 등	협력 분야	환경 및 환경과 연계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사회발전 분야
의존성 높음	남북관계 영향	회복력 높음
남북한이 협력 당사국으로 고정	유연성	협력 여건에 따른 직·간접 협력, 옵서버 형태의 다양한 접근
-	검증 방법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 모니터링 및 평가

자료: 남북 그린데탕트 관련 내용은 추장민 외(2013) 참조

국제법 기반의 한반도 그린공동체 관련 법·제도 마련

국제법 기반의 법·제도 마련은 공정성 확보를 통하여 갈등을 효과적으로 중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환경에 대한 국제사회·국가·지역의 제도를 연계함으로써 효과적인 협력 기반을 제공

- 서로 다른 정치체제의 갈등, 환경보호와 이용에 대한 정책의 불일치성, 국가 주권 강화로 인한 국제사회의 개입 여지 축소와 지역별로 다자 또는 양자 간 법·제도 존재 등으로 국제환경법은 제정되고 있지 않음
- 지역적으로 최적화된 법·제도라 할지라도 글로벌 차원에서는 적절치 않거나 조정될 필요가 있으며 다양한 수준에서의 목표 일치하는 효율적인 역량 투입 및 재분배를 통해 효과적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음

환경협력 분야에 해당하는 국제 조약·계획 등에서 제시하는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한반도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투명하고 유연한 집행수단을 마련

- 예) ‘유엔산림전략계획 2017-2030’을 기반으로 우리나라의 산림기본법과 북한의 산림법을 포괄하는 ‘한반도 산림법’을 제정하고 관련 법체계 정비 추진

1) 협력분야와 관련된 종합적 지원을 위하여 다양한 지원분야를 클러스터화하고 효과적인 지원 및 중복과 격차를 최소화하기 위한 접근법(IMO, <http://imo.or.kr/index.php/인도적지원>, 2022년 6월 30일 검색)을 말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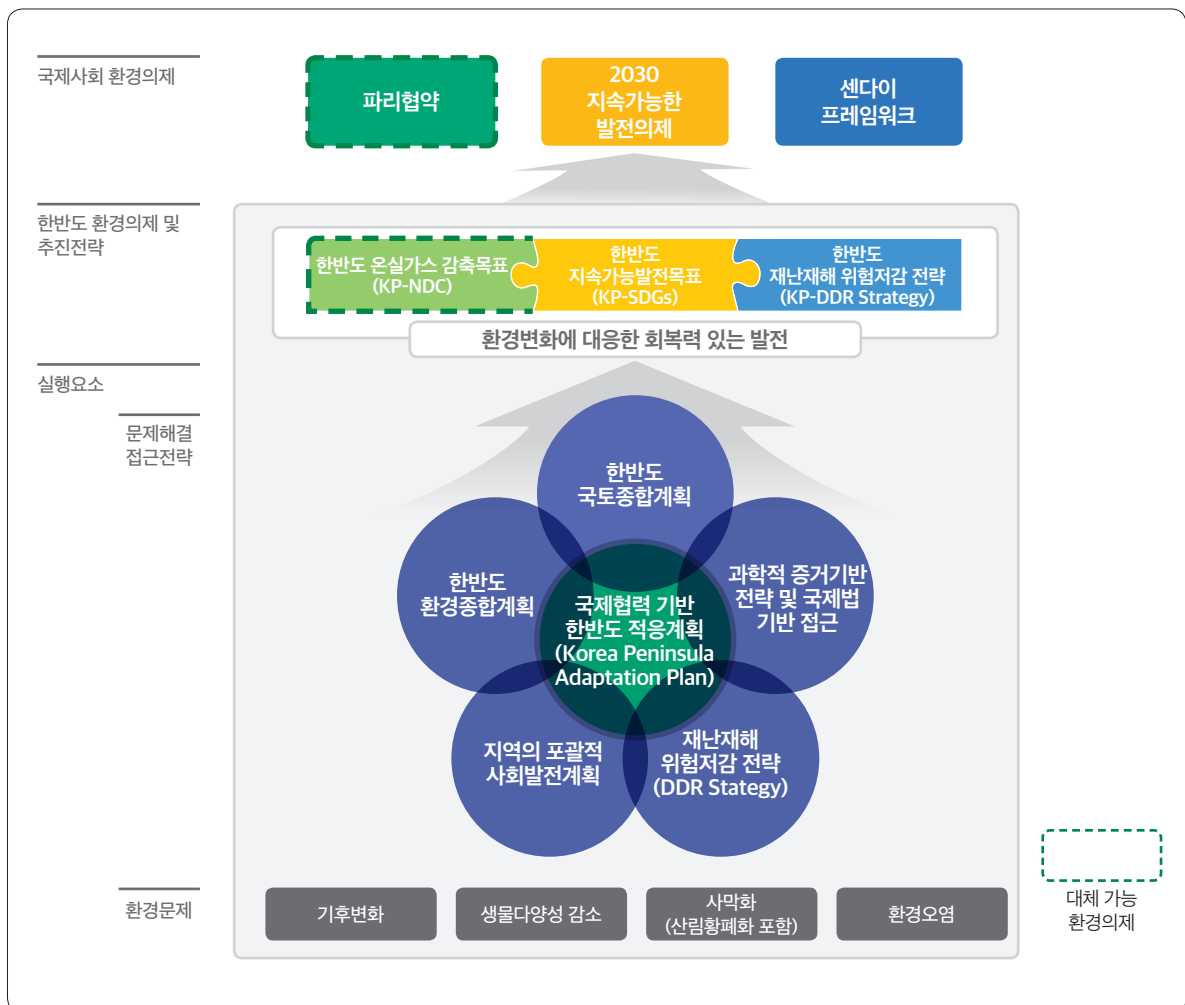
3

한반도 그린공동체 추진체계

한반도 그린공동체의 추진체계는 환경의제를 중심으로 지속가능목표 및 재난재해 위험저감을 연계함으로써 협력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문제해결 접근전략을 통해 효과적인 협력방안 마련

- 한반도 그린공동체 추진체계는 선형이 아닌 양방향의 프로세스로서 상위의 환경의제는 목표를 정의하고 환경문제에 대한 접근방식을 제시해주지만 하위의 접근전략을 통해 조정되고 정교화되는 과정을 반복함
- 지속가능한 발전의제에 기여할 수 있는 환경문제 해결을 목표로 설정하고, 협력의 기반을 매물시킬 수 있는 재해재난에 대응하기 위하여 센다이 프레임워크²⁾를 통합한 한반도 그린공동체 추진체계를 구축함
- 한반도 환경의제 및 추진전략은 국제사회의 환경의제와 연동하되 한반도의 특수성을 고려하기 위하여 국제 또는 남북 환경협력의 경험과 가치 공유를 통한 상호 호혜적인 한반도 차원의 목표를 설정함
- 환경문제 해결 접근전략은 과학적 증거기반하에 한반도 국토·환경종합계획, 재난재해 위험저감 전략 및 협력의 지속가능한 성과를 위한 포괄적 사회발전계획을 통합한 한반도 적응계획 기반의 추진전략을 마련함
- 실행요소의 환경문제는 한반도 환경의제와 연계 가능한 지역의 환경문제로서, 한반도 환경의제를 온실가스 감축으로 설정한다면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지역의 환경문제인 산림황폐화지 복원을 선정하고 추진함

그림 5 한반도 그린공동체 추진체계



2) 센다이 프레임워크(Sendai Framework for Disaster Risk Reduction): 재난재해에 대한 예방·대응·회복을 위한 국제적 행동지침

4

한반도 그린공동체 추진을 위한 정책제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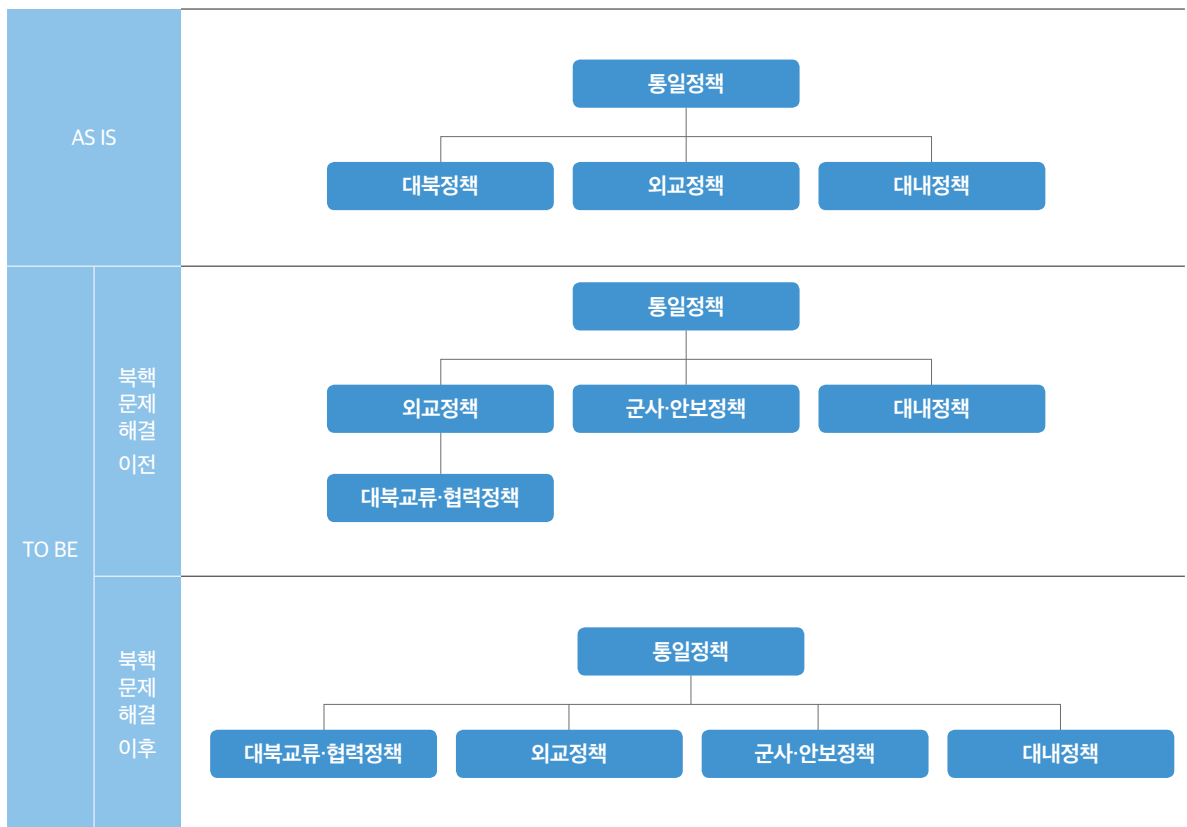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는 대북정책을 대북교류·협력정책과 군사·안보정책으로 분리할 필요가 있으며 '우리끼리'가 아닌 국제사회의 보편적 가치를 원칙으로 한 협력을 추진할 필요

- 통일정책은 대북정책, 외교정책, 대내정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북정책은 통일 과정에서 남북관계를 관리하는 정책(민태은 외 2017, 104)으로 통일정책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정책'을 공익을 위해 이루려는 목표와 이를 위한 실행행위로 정의한다면 지금까지의 대북정책은 갈등적 요소인 군사·안보와 평화적 요소인 교류·협력이 혼재되어 상반된 목표가 하나의 정책에 공존하는 형태였음
- 따라서 대북정책을 대북교류·협력정책과 군사·안보정책으로 분리하고 북핵문제 해결 이전에는 국제사회의 규범 준수와 실효적인 협력을 위해 외교정책을 강화하여 대북교류·협력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통일외교정책 강화가 필요한 이유는 북한의 핵무력 완성 선언으로 남북 또는 동북아 차원의 지역문제에서 국제적 문제로 전환되었기 때문이며 이는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가능하게 할 수 있음
- 이를 위해 기존의 미국, 동북 및 동남아시아, 유럽 등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특히 UN 차원의 국제협력 중 한반도 차원에서 적용할 수 있는 협력분야에 대한 통일외교 능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보편적 가치를 원칙으로 한 대북교류·협력정책 추진은 갈등요소를 최소화함으로써 북한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으며 강화된 국제협력은 투명성과 공정성을 증대시켜 협력의 지속가능성 제고

- 남북의 경제력 차이가 크고 지금과 같은 분단체제하에서 통일과 안보를 전제로 한 기능주의적 협력은 북한이 흡수통일에 대한 우려로 협력에 따른 실익을 인지하더라도 적극적인 변화와 대응이 어려울 수 있음
- 따라서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입각한 대북교류·협력정책 추진을 통해 국제사회의 가치에 부합하고 북한의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협력의 지속가능성과 회복력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그림 6 우리나라 통일정책의 구조변화(안)



국제사회의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고 지역주민의 회복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한반도 그린공동체' 추진

(정책제안)북한주민의 인도적 위기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며 대북제재를 적극적으로 준수할 수 있고 북한의 개발수요에도 부합할 수 있는 한반도 그린공동체 추진

- 한반도 그린공동체는 UN 산하 지역주도 환경 이니셔티브로 추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국토계획과 환경계획 연계, 인도적 개발협력 추진, 국제법 기반의 법·제도 마련 및 국토·환경 모니터링 등을 추진
- 대북제재가 해소되면 북한이 개발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여 환경에 대한 관심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한반도의 환경문제에 대한 접근은 '바로 지금이 최적기'임을 인식하고 한반도 그린공동체를 적극 추진해야 함

표 2 정책제안 및 주요 내용

정책과제	주요 내용
한반도 그린공동체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반도 그린공동체 국제환경협력 위원회'(가칭) 구성 및 UN 환경프로그램(UNEP) 산하 지역주도 환경 이니셔티브로 추진 • 한반도 SDGs 및 재난재해 경감계획과 연계방안 마련 • 한반도 차원의 단계적 적응계획 수립
한반도 국토계획·환경계획 연계방안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계획 및 환경계획을 위한 데이터 수집 및 적용방안 마련 • 지역주민 참여를 기반으로 한 국토계획·환경계획 연계방안 마련 • 한반도 차원의 단계적 국토계획·환경계획 연계방안 마련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을 위한 인도적 개발협력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량 및 에너지 등 인도적 지원계획 수립 • 북한 주민의 삶의 질과 회복력을 강화할 수 있는 인도적 개발협력 사업 발굴 및 추진 • 대북제재를 고려한 직업전환 및 지역산업 육성계획 수립/지원
국제법 기반 한반도 그린공동체 법·제도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반도 환경협력을 위한 국제법 및 지역법(다자·양자 등) 통합 적용방안 연구 • 한반도 그린공동체 관련 법 제정 및 법체계 통합방안 연구
국토·환경 모니터링 및 평가방안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환경 모니터링 및 통합활용 방안 마련 • 환경협력 성과평가 지표 및 평가방법 개발

참고문헌

- 민태은, 이기동, 이상근, 전재성. 2017. 대북·통일정책 관련 주요 쟁점과 정책추진방향. 서울: 통일연구원.
 임철희. 2020. 북한 산림복원 계획·정책의 생태계 서비스 기반 경제적 가치평가. 통일부, 고려대학교.
 추장민, 정성운, 정소라, 박선규. 2013. 한반도 「그린 데탕트」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 세종: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Angie, D., Anika, T., Malte, M. 2019. Alignment to Advance Climate-Resilient Development. NAP global Network. https://www.international-climate-initiative.com/legacy/Dokumente/2019/2019%3C%9F418_SPA_policybrief2.pdf (2022년 12월 8일 검색).
 Groupe URD, HAP International, People In Aid and the Sphere Project. 2014. Core Humanitarian STANDARD. http://www.urd.org/wp-content/uploads/2018/09/Core_Humanitarian_Standard_English.pdf (2022년 12월 8일 검색).
 IMO. <http://imo.or.kr/index.php/인도적지원/> (2022년 6월 30일 검색).
 Kee B. Park, Miles Kim and Jessup Jong. 2019. The Human Costs of UN Sanctions and Funding Shortfalls for Humanitarian Aid in North Korea. 38North. <https://www.38north.org/2019/08/parkkimjong082219/> (2022년 11월 24일 검색).
 Reliefweb. 2005. WFP addresses the challenge of long-term food security in North Korea. <https://reliefweb.int/report/democratic-peoples-republic-korea/wfp-addresses-challenge-long-term-food-security-north-korea> (2022년 8월 25일 검색).
 UN Security Council. 2019. Report of the Panel of Experts established pursuant to resolution 1874(2009). <https://digitallibrary.un.org/record/861367> (2022년 12월 8일 검색).

※ 이 브리프는 "임용호, 강민조, 안재성. 2022. 한반도 그린공동체 추진을 위한 산림협력 추진방안 연구. 세종: 국토연구원"의 결과를 정리한 것임.

- **임용호** 국토연구원 한반도·동아시아연구센터 부연구위원
(yhlm@krihs.re.kr, 044-960-0644)

